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0. 18. 양도인 ○○○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인천광역시 ○○구 ○○로 ○○○(○○동)에서 ‘○○○○○○’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6. 8. 25. 15:45경 이 사건 업소의 식육(한우불고기500g)을 수거하여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6. 8. 30. 검사의뢰용 시료가 비한우로 확인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 검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9. 12. 청구인에게 「축산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10.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6. 11. 15. ~ 11.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한우소매업 영업자로 한우 전문가가 아니므로 도축장에서 구입한 식육을 한우로 믿고 판매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력번호를 위조하지도 않았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지도 않았다. 만약 문제가 된 소가 한우가 아니라면 도축장에서 한우처럼 이력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축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 보관 중인 축산물 시료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된 행정처분이 틀림없다.

###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NA동일성검사기법은 도축장에서 도축처리 되는 축산물로부터 채취한 보관용 시료와 검사의뢰용 시료에 대한 유전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방법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전영업자인 ○○○에게 보관 중인 시료에 대하여 도축장에서 채취한 보관용 시료(이력번호 ○○○ ○○○○ ○○○○ ○)와 DNA 동일성검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은 한우확인시험과 DNA동일성검사는 별개의 다른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2016. 9. 27.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비한우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인 한우확인시험(제3법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검사를 통해 비한우로 부적합 판정한 것으로 상당한 법적 구속 요건이 갖추어진 검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사와 동일한 한우확인시험의 재검사를 시행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

###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3, 제27조, 제3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51조

####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6. 10. 18. 양도인 ○○○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받아 인천

광역시 ○○구 ○○로 ○○○(○○동)에서 ‘○○○○○’ 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6. 8. 25. 15:45경 이 사건 업소의 식육(한우불고기500g, 돼지목살 500g)을 수거하여 같은 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검사를 포함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의뢰하였고, 2016. 8. 30. 이 사건 업소의 식육 중 한우불고기가 비한우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해당 축산물 검사 결과에 대한 부적합 판정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6. 9. 12. 이 사건 업소의 전영업주 ○○○에게 「축산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9. 27. 전영업주 ○○○은 절대로 한우 외에는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비한우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10.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2016. 11. 15. ~ 11. 21.)의 처분을 하였다.

## 다. 판 단

###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등 식육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에 이

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각 호에 해당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이 검사기관이 이 사건 업소의 식육(한우불고기 500g)에 대하여 한우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우가 아님이 판명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7일을 처분하였고,

문제가 된 소가 한우가 아니라면 도축장에서 한우처럼 이력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이상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축산물판매업자의 식육제품의 종류에 대한 허위표시 진열·판매 등

의 행위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축산물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축산물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6. 9. 29.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 비한우로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재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나 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어 소정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소정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서 소정의 증명서 상에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재검사가 가능한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해당 식육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무조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관 중인 축산물 시료에 대하여 제3의 기관에 재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